

중소 환경시설비 용자역 상향 조정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용자역이 올해부터 상향 조정된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 황홍석)은 2001년도 환경개선자금으로 총 640억원을 확보, 지난달 중순 공고한 후 곧바로 용자에 나섰다. 환경개선자금은 수질 대기 등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600억원(작년 500억원), 방지시설 제작업체의 기술개발에 40억원(작년 4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환경관리공단은 특히 배출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종전 개별 사업장에 대해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했으나 이를 상향조정, 최고 30억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또 2개 이상 사업장이 공동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용자역을 대폭 늘렸다. 사업장에서 이 자금을 사용하려면 환경관리공단 본부나 전국 지사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연리 6.75%(변동금리)이고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환경산업체에 대출하는 기술개발자금은 최고 3억원, 산업화자금은 10억원 한도이며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연리 6.75%, 변동금리) 조건이다.

환경부, '환경친화기업 정보 네트워크' 구성

환경친화기업 사이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대중민 홍보 활동을 위한 '환경친화기업 정보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들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의 5개 지역 협의체를 하나로 묶어 정보 네트워크(www.efriendly.co.kr)를 구성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세부 운영방침을 확정된 뒤 올 4월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정보 네트워크에는 선진국의 환경규제 동향과 각종 국제 환경회의의 소식, 환경신기술, 환경신기술 적용 사례, 환경교육 및 전시회, 환경개

환경관리공단은 특히 배출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종전 개별 사업장에 대해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했으나 이를 상향조정, 최고 30억원까지 빌려 주기로 했다. 또 2개 이상 사업장이 공동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용자역을 대폭 늘렸다.

선 동호회 활동 등이 자세하게 소개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공적인 환경오염 개선 사례 등을 집중 소개, 중소기업들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5년 도입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란 기업이 제품설계, 원료조달, 생산공정, 사후처리 등 모든 생산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스스로 평가한 뒤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마련,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천하는 제도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현재 모두 105개다.

환경산업 진입규제 등 개선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환경산업의 등록기준을 정비, 유사업종을 통합하고 환경 검사기관의 진입규제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범위가 유사한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통합하고 '측정대행업'과 '환경관리대행업'은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환경관리공단, 한국기계연구원, 산업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과 환경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2개 공공기관으로 국한된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검사기관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폐수처리장 8개 신설-366억 투자

환경부는 올 총 366억5천만원을 들여 군장공단 등 전국 8개 공단지역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공공 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군장 공산, 통영 안정 등 전국 8개 지역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신규 확충키로 했다.

환경부는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부하량을 근원적으로 저감함으로써 공공수역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폐수종말처리율을 지금의 78%에서 오는 200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사업별 건설계획을 보면 단지개별이 한창인 공장지구의 경우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춰 폐수처리시설을 조기 건설키로 하고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하루처리 3만톤급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총 2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또 통영 안정공단에는 76억2천만원을 들여 질소·인 등 부영양화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오는 2003년까지 확충키로 했으며 39억4천만원으로 경남 함안 칠서공단내 고도폐수처리장을 오는 2002년까지 건설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파주 금파지역에 하루처리 600톤급 규모의 소규모 폐수처리장을 올 연말까지 건설키로 하고 사업비 8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전남 동광양공단내 오염물질을 전용처리하는 고도처리장을 올해말까지 건설하는데 4억7천만원을 들이기로 했다. 이밖에 전남 여천, 전북 익산 등 2개 공단에 9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소규모 탈취전용시설을 올해말까지 건설키로 했으며 대구 남공단지역내 공동탈취시설 설치에 10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했다.

수도권 3개 시·도 대기오염감시망 통합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올해 중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이

에 따라 수도권 지역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이동경로 파악이나 오존경보 발령시간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져 대기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19일 수도권 3개 시·도에 설치된 76개의 대기오염 측정소를 연결, 수도권 지역 대기를 실시간으로 공동 감시하는 시스템을 올 10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특히 76개 측정소 가운데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33곳의 관리권을 이달부터 넘겨받아 기존 감시망에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전국 대규모 사업장의 굴뚝이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올해 말까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중부권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설치, 현재 설치 운영중인 영남권과 호남권 측정치를 온라인으로 연결 전국적인 통합감시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전국 대형사업장 굴뚝 통합 관리

올해 말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전국 대규모 사업장의 굴뚝이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올해 말까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중부권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설치, 현재 설치 운영중인 영남권과 호남권 측정치를 온라인으로 연결 전국적인 통합감시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굴뚝자동감시체제(TMS)는 일선 사업장의 굴뚝에 대기오염측정센서를 부착, 24시간 측정치를 지역관제센터와 지방환경청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 현재 울산·온산(30개 사업장, 57개 굴뚝)과 여천(12개 사업장, 29개 굴뚝)지역에서 시

행중이며, 수도권 대형 사업장에서는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환경시설사업소에 환경학습센터 운영

경남 진해시가 환경시설사업소에 환경학습센터를 운영,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처음으로 진해시 덕산동 549 공유수면에 위치한 환경시설사업소 내에 200㎡ 규모의 환경학습센터를 지난 1월 4일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다.

한번에 50명을 맞을 수 있는 이 학습센터 1층에는 시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 영화, 어린이 환경만화 등을 상영할 수 있는 시청각실이 마련돼 있으며 2층에는 각종 환경사진, 재활용품 등을 구경할 수 있는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공무원-시민단체 환경단속 협력

경기도는 투명한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정부기구(NGO)와 손을 잡고 민관합동 환경단속반을 구성,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道) 행정부지사가 지휘하는 단속반은 팔당상수원, 산업공단, 골프장 환경오염 담당 등 3개팀, 8개반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53명과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 14명이 참여하게 된다.

단속반에는 각종 오염 수치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와 전문인력이 지원되며 분기별로 단속 결과가 공표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4분기 환경분야KT마크 3건

과학기술부는 최근 2000년 4/4분기 국산신기술 인정(KT마크) 예정기술 공고를 끝마치고 총49개 기술에 대해 KT마크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협기성·탈탄산 처리에 의한 제지공정백수 재이용기술(삼성엔지니어링)', '간이 상수도용 차아염소산칼슘의 접촉식 용해기술(한삼코라)',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의 고속 발효 소멸기술(명진이엔터)' 등 환경분야 신기

술 3개가 KT 마크를 부여받았다.

대기오염 물질 획기적 제거기술 국내 최초 개발 스모그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동신대 환경공학과 김조천(金朝天 41) 교수팀은 지난 12월 14일 99년 4월부터 과학기술부에서 '전자빔 조사(照射)를 이용한 VOC 제거기술' 개발을 맡아 연구하다 국내최초로 개발에 성공, 12월 19일 하와이에서 열린 'Pacifichem 2000' (태평양 연안화학학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방법은 인위적으로 만든 전자빔을 쬐어 벤젠과 톨루엔, 에틸벤젠 등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전자빔 조사법(照射法). VOC는 분자구조가 긴 특징이 있으며 가속기를 통해 인공적으로 만든 100만V에 달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분자구조를 잘게 부수는 원리를 이용했다.

이 기술은 보통 분자구조는 유해한 물질일수록 길고 무해한 경우 짧은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VOC물질의 90% 이상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뒀다.

국가공단 환경관리권 지자체이양 전망

지역 환경청과 환경관리청에서 갖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관리권이 울산시의 건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전망이다.

시는 총리실 산하 지방이양실무추진위원회가 지난 12월 13일 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국가산업단지 환경관리권의 지자체 이양문제를 심의, 환경부에 대안제출을 요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 환경청과 수계별 환경관리청이 갖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관리권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졌다.

시는 대기오염물질의 95%가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으나 단속권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있어 환경개선 시책을 추진하지 못하자 "오염업소 단속권을 시에 넘겨달라"고 계속 건의해 왔다.

온산공단 폐수기준 완화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안 공장들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울산시는 지난 12월 14일 환경부 승인을 받아 온산공단내 기업체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은 각각 20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250ppm 이하로 각각 완화한다고 고시했다.

종전의 허용 기준은 BOD와 SS 각각 80~120ppm, COD 90~130ppm 이하로 보다 엄격히 규제돼 있었다. 시의 이런 완화조치는 언뜻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업체엔 폐수처리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도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는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에서 비롯됐다.

건교부, 수도권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정부는 수도권내 부분별한 도시개발방지 및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키 위해 수도권에서 추진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키 위해 수도권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제한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2월 16일 건교부에 따르면 수도권내 부분별한 도시기능과 난개발방지를 위해 이미 수립된 2차 수도권정비계획(97~2011년)을 전면 재수정, 올해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정비계획에서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이 권역별정비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어 토지 이용 및 도시개발차원에서 난개발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방지키 위해 토지이용·도시개발의 입지, 형태, 규모 등에 관한 사전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기능을 강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내 부분별한 도시개발 방지 및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키 위해 수도권에서 추진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전, 월성원전에 삼중수소 제거설비

한국전력은 2002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총 800억원을 투입,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삼중수소 제거설비를 건설키로 했다.

한전은 최근 자사 원전팀 및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을 위한 회의를 열고 공사일정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삼중수소는 중수로형 원자로의 핵반응과정에서 감속재인 중수가 변형돼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로 지금까지 원전지역 주민과 각종 환경단체로부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도관 부식방지 시스템 개발

인텔세라믹(대표 박명하)은 아파트와 일반 빌딩에 부설돼 있는 수도관 부식을 방지하는 바이오 세라믹 시스템장치를 개발, 공급에 나섰다. 이 장치는 상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녹물이나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수처리시스템으로 바이오 세라믹 장치에서 금속 음이온을 방출, 배관에 붙어 있는 불순물 가운데 철슌과 마그네슘, 나트륨 등 양이온과 결합해 불순물을 분리시켜 배출한다. 이에 따라 화학약품을 넣거나 배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042)637-2031

축산-분뇨폐수 처리 신공법 등장

축산폐수와 분뇨폐수를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금오공대 토목환경 및 건축공학부 이승환 교수는 지난 12월 19일 금오공대와 인동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환경학술 심포지엄에서 '액티자임을 통한 유기성 오염물질의 제거 및 활용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 공법을 소개한 것.

이 교수에 따르면 미생물 종균제인 '액티자임(Actizyme)'을 축산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 투입했을 때 축산폐수처리장의 경우 투입전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120~150mg/l에서 투입후에는 20mg/l 이하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분뇨처리장의 경우 '액티자임'을 투입한 후에는 BOD를 비롯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등이 90% 이상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액티자임'은 투입 후 28일 동안 생존한 뒤 자연소멸돼 기존 활성오니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액티자임'을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권 환경부 이관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권한이 산업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폐기물 수출·입 허가권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폐기물의 수출·입시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정책의 전환으로 풀이된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시작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수원 李樹元)은 지난 1월 2일부터 최첨단 분석장비와 전문 인력을 가동해 본격적인 민원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1일 개원한 울산보건환경원은 1부 1소 7개과 49명의 인력으로 그동안 최첨단 장비 도입 등의 업무준비를 마치고 각종 질병과 식품, 축산, 의약 품 등의 보건관련 분야와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관련 분야의 시험·검사, 조사·연구로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게 된다.

환경부, '월드컵 담당 환경관리평가반' 구성

2002년 월드컵을 환경친화적으로 치러 내기 위해 '환경관리평가반'이 구성된다.

환경부는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수원 등 10개 월드컵 개최도시의 환경 관련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기 위해 '환경관리평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월 21일 밝혔다.

20명 규모로 구성될 환경관리평가반은 총괄기획, 자연경관, 물절약·수질, 대기 관리, 폐기물관리 등 5개반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민간단체 전문가들도 팀별로 1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건교부, 전국 하천정비 10조 투입

정부는 수질환경개선 및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전국 주요하천에 9천374km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 같은 하천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전국 주요하천에 유역특성에 맞는 치수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을 펼쳐기로 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중기하천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질환경개선 및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전국 주요 하천에 모두 10조원의 예산을 투입, 제방축조 및 호안보강 등 하천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울초 착공예정으로 국내 최초의 운하가 될 경인운하에 골망태가 설치되고 부레옥잠 등 수초가 심어지는 등 다양한 환경친화 시설이 설치된다.

국가하천 142km를 이 기간 중 정비하고 시·도 지사가 관리주체인 지방하천 9천232km를 연차적으로 확충기로 했다.

주공, 최적 오수처리시설 시공

아파트단지를 계획하는데 있어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문제는 여간 고민되는 게 아니다.

설치부지가 한정돼 있어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데다 시설의 규모도 작아 전문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주택공사는 최근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후평가와 수질분석 등을 거쳐 최적의 오수처리시스템을 자체개발, 전국 8개 아파트단지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후속처리공정으로 잔류 오염물질인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응집여과장치가 추가되고 처리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라인믹서기와 에어리프트식 펌프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또 주처리공정과 후속처리공정의 각 처리계통을 과학적으로 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처리시설의 부지를 최소화했다.

주공은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소요부지가 현행 시설의 80%만 필요하고 공사비도 현행 시설의 78%에 불과해 그동안 이 시스템이 적용된 8개 아파트단지에서 10억2천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리효율이 높아져 전문관리인이 없어도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할 수 있어 관리비가 현행시설의 83%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역취제거 새 미생물 개발 성공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혀를 알아 온 축산분뇨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크게 줄이고 분뇨의 부속기간(분뇨를 썩이는 기간)도 최고 30% 가량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미생물이 개발돼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한몫을 하게 됐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2월 22일 농업기술원내 이영한(33) 박사팀이 3년간의 연구끝에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균주(미생물)를 최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박사팀이 이번 새로 개발해 '바이러스 서브티리스 LYH201'로 명명한 이 미생물은 설치 50도의 환경에서 셀룰로오스 분해효소와 목질-세포벽 분해효소 등 모두 다섯종류의 섬유질 분해효소를 분비,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휘발성 지방산을 79%까지 줄여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종전 100일 가량 걸리던 퇴비의 부속기간도 최고 70일로 단축시키는 것으로 시험 결과 드러났다. 이 박사는 새로 개발한 이 균주를 활용해 만든 축산분뇨 퇴비를 멜른재배에 사용한 결과 수확량이 8% 증대되고 멜론의 당도도 6~7% 가량 증진되며 토양의 물리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농업용 작물에 사용하면 토양 공극률이 향상되고 경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울초 착공 경인운하 환경친화시설 만든다

울초 착공예정인 국내 최초의 운하가 될 경인운하에 골망태가 설치되고 부레옥잠 등 수초가 심어지는 등 다양한 환경친화 시설이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 28일 경인운하 건설 과정에서 환경 단체의 의견을 받아 들어 운하 입구

에 자갈 60만을 깔아 여과시킨 물을 들여보내기로 했다.

또 길이 18km의 운하 중 약 15km에 이르는 평지 구간의 운하 둑 아래부분은 풀밭대로 다지고 오염 제거 효과를 내는 부레옥잠 등 수초를 심는 한편 지상부에는 갈대등을 심을 계획이다. 특히 폭 100인 운하에는 곳곳에 페타이어 수심개를 엮은 부도(浮島)를 놓아 오염물질이 달라붙게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운하쪽과 굴포천이 접하는 부분에는 고무댐을 설치, 평소에는 굴포천 물이 한강으로 흐르나 장마철이나 홍수시에는 고무댐을 열어 운하쪽으로 흐르게 해 굴포천 상류 신도시 지역의 오염 물질을 차단할 예정이다.

목포시, 환경오염 사범 전담반 설치

목포시 환경오염 사범 전담반 설치 전남 목포시가 환경오염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공동처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최근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출동해 민원을 해결하고 오염 사범을 처리하기 위해 '환경오염 민원 전담 공동처리반'을 신설, 시 공무원 3명을 전담배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운영된 처리반은 수질, 대기, 소음, 비산먼지 등 각종 환경 오염원에 대한 순회 단속을 펼치는 한편 관련민원 신고가 있을 경우 2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해 신속대처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5년으로 제한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고갈과 폐공방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의 개발 이용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건교부는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지하수관측망의 설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제도의 도입, 지하철공사 등 토지굴착으로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한 이용대책수립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고갈과 폐공방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의 개발 이용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제도가 도입된다.

고 밝혔다. 건교부는 종합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국가가 수립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온천수, 먹는 샘물, 농어촌용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했다.

또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지하수채취가 억제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후 방치된 폐공의 원상복구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토록 의무화했다.

원천 방수 시멘트 나와...돌테크

건설공사에서 부실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불안정한 방수문제를 개선하고 시공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이 가능한 구제방수시멘트가 선보였다.

경기도 수원 소재 벤처기업인 ㈜돌테크는 최근 천연광물성 무기질성분을 재료로 사용해 융합성이 좋고 재료분리현상을 방지, 방수능력이 뛰어난 구제방수시멘트 '포미코21'을 개발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전문시공인력의 도움없이 일반 작업자도 쉽게 시공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은 물론 방수재료가 균일해 하자발생이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기존 방수재가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방수층 형성으로 방수층 파괴

시 하자가 발생하는 등 내구성이 단기인데 비해 이 제품은 시공면 전부가 물막음층을 형성, 반영구적인 방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소형 소각로 설치 규제

올해부터 경기지역에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소형 소각로의 설치가 규제된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30일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소형 소각로의 설치를 금지하고 대신 대형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도(道)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한달 간 도내 101개 소형소각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84.2% 85개 시설이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부칙이 의무화된 자동온도기록계를 갖추지 않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 용인 이천 여주 광주 등은 대형소각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나 건설 중 이면서도 소형소각로를 새로 설치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자원 재활용률 크게 낮아져'

페타이어와 금속캔 등 자원의 재활용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99년 자원 재활용 실적'을 집계한 결과 99년 발생한 페타이어 2천272만2천개 가운데 47.6%인 1천81만6천개만 재활용되는 등 재활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다고 지난 1월 3일 밝혔다. 페타이어 재활용률은 98년의 66.1%(2천72만9천개중 1천371만개)에 비해 18.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특히 폐윤활유 재활용률은 54.5%(16만5천760t 중 9만379t)에 그쳐 전년도의 93.8%(22만9천323t중 21만5천175t)에 비해 39.3%포인트 하락했다. 폐윤활유 재활용률은 95년 이후 계속 80% 이상을 유지해 왔다.

금속캔 재활용률도 98년의 68.3%(29만3천(중 20만))에 비해 4.3%포인트 하락한 64%(33만3천(중 21만3천))을 기록했다. 폐유리는 전년도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으나 65.9%(69만2천(중 45만6천))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시, 하수처리장에 탈취시설

서울시내에서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의 주요 악취발생시설에 덮개 및 탈취시설이 금년부터 설치된다.

서울시는 최근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삼암동 인근의 난지·가양하수처리장과 뚝배기처리장 등의 침사지, 침전지, 폭기조 등 악취발생시설에 덮개와 탈취시설을 설치, 하수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월드컵경기장의 관문지역에 위치한 난지·가양하수처리장의 악취방지를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에 덮개 및 탈취시설공사에 필요한 설계비 2억원을 반영, 11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중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187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본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

환경부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 큰 어짐

환경부가 매월 발표하는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가 적발업소 누락 및 오기 등으로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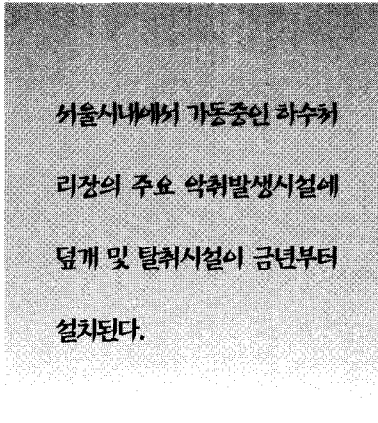
지난 1월 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가 부정확하다는 녹색연합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인지방환경관리청 등 7개 지방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적발된 업소 가운데 최근 2년간 연속 적발되고도 단속대장에 누락되거나 오기 등으로 잘못 발표된 사례는 모두 2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녹색연합이 당초 제기했던 환경부 관할 누락건수(지방자치단체 관할포함 총 누락건

수 313건) 141건보다 62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60건은 단속대장에서 완전 누락됐으며, 나머지 143건은 날짜오류 및 상호변경, 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잘못 발표됐다. 완전 누락 건수 60건 중 45건은 지방청 보고 및 본부 보도자료 작성과정에서, 나머지 15건은 발표대상 업소를 발표대상이 아닌 업소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각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 별로는 경인청 60건, 대구청 50건, 낙동강청 46건, 금강청 13건, 원주청 9건, 전주청 3건, 영산강청 1건 등이며 환경부 본부에서 잘못



발표한 건수도 21건이었다. 특히 4년 이상 연속 적발되고도 단속대장의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사항란'에 누락돼 있는 업소도 15개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환경부 본부 및 산하 지방청에 대한 감사결과만을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의 단속 결과까지 합할 경우 잘못 발표된 업소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자체보고 누락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추후 정부합동감사시 해당 지자체 및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처럼 환경오염 단속결과가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환경부는 해당부서 및 실무 담당자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단속 관련 행정업무의 완전 전산화 작업을 앞당겨 구

축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단속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오염 업소 단속시 민간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제품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전 의원은 "품질면에서 일반제품과 다를 바 없는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소비를 기피하는 현실"이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오염업소 1천1백여개소 적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전국의 1만3천313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1천168개소(8.8%)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지난 1월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한 ㈜삼원원성서공장, 한영알미늄공업(주), 대양염직주, ㈜신양피혁, 삼영수산 등 531개 업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위반내역을 보면 무허가 운영 325개(27.8%), 배출허용기준 초과 254개(21.7%),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14개(9.8%), 기타 475개(40.7%) 등이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대구 달서구의 ㈜삼원원성서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흡착제인 활성탄을 내장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고발됐다.

대전 대덕구 소재 섬유제품제조업체인 대양염직주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색폐수의 색

도를 낮추기 위해 하루평균 316m³의 공업용수를 폐수에 유입시켜 희석처리해 오다 적발돼 과징금 4천500만원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이밖에 대구 서구 동일염공과 인근 달서구의 ㈜삼성사, 경기도 시흥 ㈜세왕섬유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이 드러나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변경 미신고 등으로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제주도, 통합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마련

제주도는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을 마련, 지난 1월 5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발사업자가 사업 추진시 환경과 교통, 재해 등에 대해 부문별로 각각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해 왔으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 환경부의 권한 이양 조치로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됨에 따라 도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는 조례안에서 제주도의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타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육상 어류양식장, 레미콘·아스콘, 먹물 저수시설, 하천복개공사, 건축물과 공작물 등 5개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환경 건설기금 조성 추진

앞으로 총 공사비의 최고 1%를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써야하고 공공 공사비의 일부를 '건설환경 관리비'로 할당해야 하는 등 건설공사의 환경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된다.

또 도로나 터널 등 대형 공사물에서 나오는 수의 중 일부를 떼어 '친환경 건설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로 훼손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11개 세부사업 내용을 담은 '건설환경 중장기(2001~2006년) 기본 계획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으로 총 공사비의 최고 1%를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써야하고 공공 공사비의 일부를 '건설환경 관리비'로 할당해야 하는 등 건설공사의 환경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비의 0.005~0.07% 수준인 환경영향평가비용을 0.2~1%까지 쓰도록 규정, 최고 200배 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환경훼손이 큰 대형사업은 사업 후에도 환경 변화를 감시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바뀐다.

공공공사는 총 사업비의 2%(작년 사회간접자본 예산 기준시 3천억원) 가량을 '건설환경관리비'로 할당, 시공 과정에서 환경파괴 방지 및 복원 등에 쓰게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11개 세부 사업중 하나로 환경친화적 건설 기술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 업체를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하고 건설 현장에 '환경관리 시방서'를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불황에 환경비용 부담가중 '이중고' 울산 유화업계 "설상가상"

울산지역 유화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울산시가 강력한 환경규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울산과 온산 국가공단 내 유화업체들이 환경관련 투자비용 증가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울산지역 유화업계에 따르면 유가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기도 악화될 형편인데다 울산시가 올 상반기부터 연료유인 벵커C유의 황함량을 0.5%에서 0.3%로 낮추는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환경관련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해 3월 국가공단내 128개 업체가 울산시 및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이후 환경개선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유화업계의 경우 업체별로 수억~수십억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화업체들은 울산시의 환경개선계획 조기 시행에 대비, 각종 환경설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자금확보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도 유화업계의 불황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환경투자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들 값최고 3.3배 차이

강원도 홍천군 수도요금인 t 당 744.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 전북 임실군 t 당 222.6원의 3.3배에 달하는 등 수도요금이 지역 별로 극심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또 서울 시민의 하루 가정용 수도물 사용량이 전라남도 주민의 평균 사용량보다 50%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5일 환경부가 집계한 '99년 시·도별 수도요금 현황'에 따르면 99년도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t 당 396.9원으로 전년도의 348.7원에 비해 14.8%인 48.2원이 올랐다.

광역시·도별로는 제주도가 t 당 516.9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 475.4원, 전남 458원, 강원도 447.6원, 서울 446원, 광주 421.8원, 울산 404.6원, 충남 404원, 경북 387.5원, 대구 380.1원, 대전 379.5원, 인천 373.7원, 경남 370.1원, 충북 368.2원, 전북 339.8원, 경기도 310.5원 순이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전국에서 수도요금에 가장 비싼 홍천군이 t 당 744.1원을 기록했다. 경북 경산시(641.4원)와 제주도 북제주군(612.9원)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비싼 수도요금, 경기도 과천시(235.7원)와 전북 무주군(242.7원), 경북 청송군(248.1원) 등은 상대적으로 싼 요금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사용량 92년 이후 첫 감소

99년도 국민 1인당 하루 388리터 사용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급수량이 불절약운동에 힘입어 지난 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이 하루 388리터로, 93년 394리터, 95년 396리터, 97년 409리터 등으로 증가세가 꺾이고 92년(385리터)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98년)의 395리터에 비해서도 1.8%가 줄어들 것으로 물아껴쓰기 운동과 노후관교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도별 1인당 물사용량을 보면 전북이 486리터로 가장 높고 대구(444리터), 인천(438리터), 서울(423리터), 대전(416리터) 등도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에 광주(310), 제주(317), 충북(319), 울산(330) 등은 전국 평균 소비량을 크게 밑돌았다.

[창원] 폐목재 활용 숯가마 설치 '일석삼조'

경남 김해시가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나오는 폐목재 활용을 위해 숯가마를 설치, 생산한 숯으로 매립장 침출수 정화와 악취 제거는 물론 쓰레기량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해시는 최근 진영읍 설창리 쓰레기매립장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로 3m, 세로 2.2m, 폭 2.5m규모의 숯가마 1기를 설치,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황토와 내화벽돌로 만든 숯가마는 가정과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나오는 하루 4t 가량의 폐목재를 태워 만든 2~3t의 숯을 가루로 만들어 8만 2000여평의 매립장에 뿌려 악취를 제거하고 침출수에 섞여 있는 각종 중금속을 흡수토록 하고, 가루와 함께 나오는 120ℓ 가량의 목초액을 살포해 파리와 모기 등 유해곤충 서식을 억제하고 있다.

김해시는 그동안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나오는 소파와 장롱 등 대형 목재쓰레기와 공장상 폐목재를 단순소각 처리했으나 최근 숯의 정화작용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매립장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숯가마를 가동하게 됐다.

환경부, 질의외신 민원처리기간 단축

환경부는 새해 들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결재권을 하부로 대폭 위임하는 등 민간기업의 조직운영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결재권한을 세분화해 환경보전증장기계획 수립 등 중요한 정책은 장·차관이, 정책이 결정된 업무 추진은 실·국장(1,2급)이, 업무추진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는 과장(3,4

환경부는 새해 들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결재권을 하부로 대폭 위임하는 등 민간기업의 조직운영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급)이, 일상적인 단순업무는 사무관(5급)이 전결 처리토록 했다.

단순한 질의성 민원 업무도 사무관에게 맡겨 민원처리 기간을 종전 평균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사무관이 전결권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부는 성과가 좋을 경우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질의/응답 자기측정대행업체 사후 환경조사 가중 여부

◇질의 :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자기측정대행업체(대기, 수질, 소음 진동)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해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

행코자 하는바, 가능한지.

◇회신 : 사업자가 환경적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자신의 책임하에 평가대행자 기타 동 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개별법령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포함)에게 의뢰할 수도 있음

환경부, 폐기물소각시설 15곳 건설

인천 남동공단, 전주, 포항 등 전국 15개 지역에 폐기물소각시설이 오는 2005년까지 건설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위생처리와 매립대상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 급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총 2천21억원을 들여 인천 남동공단, 전주, 포항 등 전국 15개 지역에 쓰레기소각시설을 신규 확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설용량 50톤급 이상 소각처리장의 경우 입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착수키로 했으며 중소도시 및 도서지역의 소규모 소각장은 연말 완공을 목표로 오는 3~4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들 신규 소각장 건설사업을 통해 지난 99년말 기준 생활폐기물 소각률 10.3%를 금년말까지 1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는 인천 남동공단에 들어서는 인천 남부소각장의 경우 총 9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루처리 600톤급의 소각처리시설을 오는 2005년까지 건설키로 했으며 전주시에 300톤급 소각장을 오는 2004년까지 확충하는데 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했다.

썩은 물 1급수로 정화

국내 한 벤처기업이 썩은 물에서 슈리, 쏘가리, 모래무치 등 1급수에 서만 서식이 가능한 물고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폐수처리공법을 개발·특허를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도금업에 종사하던 중소기업인 유호근(兪鎬根·45)사장은 '자금 부담 없이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뜻을 두고

10년 동안 수십억원의 사재를 털어 무동력 정화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식회사 HK21환경이 개발한 HK21C시스템은 자연낙하방식을 이용한 화학적 자연 교반으로 산소를 유입시켜 PH(수소이온농도)를 맞춘 후 1급수 중수도와 슬러지가 구분돼 나오도록 한 무인 자동화 장치.

기존 폐수처리 방식은 오·폐수를 담수 한 후 약품을 강제적으로 투입하는 화학적 처리방식으로 선 유입된 폐수와 후 유입폐수가 구분 없이 혼합돼 중독 처리됨으로 인해 약품이 과다 투입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처리비용 상승과 슬러지 과다 발생, 처리효율저하 등 기동·운영비가 많이 발생하는 방식이라는 것.

하지만 HK21C는 인체의 소화기능을 형태로 선 유입된 폐수와 후유입 폐수를 구분해 자연낙하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처리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폐수처리기 파이프 속에는 수백개의 교반 시설을 설치해 폐수와 약품의 화학반응이 100% 이뤄져 완전 반응이 되도록 했으며, 일체의 동력 없이 자연낙하공법을 사용해 화학반응시 분자와 분자의 결합된 상태를 보존·처리함으로 써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폐수와 약품이 교반되는 중간공정에 공기를 투입하는 송풍장치 (Blower)와 폐수를 일정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한 열선(Heating Coil)을 설치해 화학반응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처리수를 100%재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시, 대형 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경기도 평택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버리는 소파, 장롱 등 가구류와 가전제품 등 급격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폐기물 배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시(市)가 마련한 '대형 폐기물 배출 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은 가정에서 대형 폐기물을 버릴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배출신고를 하고 읍금기관에 수수료를 낸 뒤 다시 읍·면·동에 가서 납입필증

(스티커)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출 절차가 복잡하고 납입필증 구입처가 읍·면·동으로 한정돼 있어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납입필증을 구입할 수 없는 등 주민들이 대형 폐기물 배출에 불편을 겪어 이에 따른 무단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이 가까운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납입필증을 직접 구입, 폐기물에 붙여 버릴 수 있도록 대형 폐기물 배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 제2청, 맑은 물 공급. 하천정화에 843억원 투입

경기도 제 2청은 올해 843억원을 들여 경기 북부지역의 식수 확보와 맑은 물이 흐르는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1월 9일 제2청에 따르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파주시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동두천, 파주, 양주, 포천, 가평 등 5개 시·군에 상수도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 파주시 등 9개 시·군에 108개 간이상수도시설을 확충 및 개량하고 상수도 관로 사업비로 동두천에 5억원, 양주군에 3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제2청은 하천정화를 위해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로 오염된 신천 수계인 양주, 담, 효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준설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지역 여건상 하수처리장 건설이 곤란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단독정화조를 고효율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2억4천만원, 가평군에 9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진강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폐수배출업소 집단화단지 4개소를 조성하고, 경기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공해업소를 산업단지로 이전키로 했다.

환경계획 초안 마련 위한 기업 지원

중앙환경심의회(수상의 자문기관)의 기획정책 부회는 소위원회에서 일본 환경행정의 기본방침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는 환경기본계획 초안

을 마련했다.

신 계획은 처음으로 환경회계 등 기업의 자주적인 대응을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위치를 설정하여 강력한 지원을 해나 가도록 하는 것이다. 또, 유역마다 물 순환의 목표 값을 책정하는 등 물의 순환과 지구온난화, 화학물질 대책을 포함한 11개의 중점분야시책의 기본방향을 지정했다. 종래의 환경행정에서는 환경기준의 설정 등의 규제적인 방법과, 폐기물 예치금 제도 등 경제적인 방법이 중심이었으나 신 계획에서는 이러한 관공서 주도의 방법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주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것도 환경보전의 유효한 방법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리] 하수종말처리장 3차 고도처리시설

경기도 구리시는 현재 표준활성슬러지 방법으로 처리하던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상수원 수질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해 3차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1일 시(市)에 따르면 한강상류지역인 수택동 63 일원, 1일 처리용량 16만 t 규모의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을 오는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모두 195억여원을 투입, 3차고도처리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표준활성슬러지 방법으로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산소요구량)만 처리됐으나 앞으로 3차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면 T-N(질소),T-P(인)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표준활성슬러지 방법으로 처리된 하수는 BOD (기준치 20ppm)와 COD(기준치 40ppm)가 기준치를 간신히 유지했으나 3차 고도처리방식으로 전환하면 BOD는 10ppm, COD는 20ppm이하로 각각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